

충남도, 재정 조기집행 전국 최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4조 6,920억원, 사업발주 2,966억원



충남도는 지방경기 부양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조기집행 목표액 대비 55%인 4조 6,920억원을 배정했으며 사업발주도 2천 966억원을 집행하는 등 전국 16개 광역단체중에서 제일 우선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행정안전부의 경제극복추진을 위한 긴급회의 후 도 기획관리실장(최두영)을 단장으로 하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16개반 50명이 매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가 경제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이와 관련, 이완구 지사는 지난 1월 2일 신년사에서 200만 도민과 공직자에게 내년의 도정 운영방향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에 둘 계획이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충남도 금강 살리기 사업 시동

- 금강 살리기 사업 기획단(T/F팀)구성 등 발빠른 행보



충남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강을 백제문화와 생명이 흐르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1월 19일(월) 도청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 도 및 관련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으로 「금강 살리기 사업 기획단(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공주(곰나루), 부여(합정) 지구를 2010 대백제전 수상무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시군에서 발굴한 사업이 국토해양부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천 인접지역에서 문화·관광단지 추진시 수변공원 설치 등 하천정비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하천 점·사용허가의 갱신·신규 허가 등은 조건부 또는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완 도 행정부지사는 “금강 살리기 사업이 우리도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여 역사테마파크 첫 삽 뜨다!

— 백제역사재현단지 롯데콘도미니엄 기공식



롯데의 민자사업 착수를 알리는 기공식이 1월 22일(목) 부여군 백제역사재현단지 현지에서 열렸다.

충남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부여에 국내 굴지의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 첫 삽을 뜬으로써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행여 투자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말끔히 씻을 수 있게 되었다.

롯데는 총 3천100억 원을 투입하여 5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식물원, 놀이공원, 친환경농업공원, 생태공원 등 테마파크 시설, 18홀 골프장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4계절 전천후 종합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착공하는 콘도미니엄은 322실의 객실과 컨벤션, 세미나, 아쿠아, 사우나시설 등 부대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숙박과 휴양,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으로 건설기간 중 8천여명의 고용과 1조 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파크가 운영되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제역사재현단지의 활성화는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롯데를 비롯한 국내 유수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촉매제로서의 역할과 나아가 백제문화 세계화의 중심지이자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강화 적극 추진

- 「도와 시·군 예산 중 680억을 절감하여, 일자리 1만 4천개 추가 창출, 긴급복지서비스 2만 가구 지원키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충남도와 시·군, 산하기관, 민간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산의 절감으로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이른바 신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공동 발표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으고 있어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2월 10일 도와 시·군의 기존 예산에서 680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재원으로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법정보호대상자 외에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직, 휴·폐업한 기업근로자 등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지원 등의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 위기 가정 희망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도내 시장·군수와 14개 민간단체장도 함께 했다. 한국노총충남본부, 충남새마을회, 바르게살기충남협의회, 농업경영인충남연합회, 충남여성단체협의회 등 참석한 민간단체장들은 금년도 충남도 예산에 계상된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스스로 줄여서 지원받겠다고 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분위기가 충남도내에 조성되고 있다. 충남도의 이번 대책은 도내 행정기관과 민간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의미

가 있다.

도와 시군은 금년도 예산 10조 3,539억 원(도 3조 8,641, 시군 6조 4,898)중 국고보조사업, 채무상환, 법적의무적경비 등 절감이 불가능한 예산을 제외한 1조 2,302억 원(도1,362, 시군 1조 940)을 대상으로 기존 예산을 정밀 재검토하여 이중 5.5%인 680억 원(도 100, 시군 580)을 다시 절감하기로 한 것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예산은 이미 지난해 말 편성 당시 예년에 비하여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지만 금번 도와 시군이 수범을 보이는 취지에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맨 것이다.

이번 예산절감은 도와 시·군, 민간단체에서 예산 낭비요인 발굴과 행사경비 등을 절감하였다. 특히 도비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들이 경제위기 극복취지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을 일부 반납하거나 규모를 줄이기로 하였다.

절감된 예산 중 400억 원은 우선 일자리 추가 창출에 사용된다. 기업 휴폐업 등으로 민간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대응하여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되, 일회성 소모성 사업이 아닌 기업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가기로 했다.

기초수급자 등 법정 보호대상자 외에 가장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는 위기가정 2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화재사망 으로 생활이 어려운 신 빈곤 가구이며, 이들 가구에 대하여는 가구별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지원,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그간 도내 공업고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전문계고 해외 인턴ships 농고와 수산고 등 도내의 모든 전문계 고교로 대상을 확대하고 인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정 방문 한글교육(천안시), 저소득가정 전기안전점검(공주시), 저소득수급자녀 수학여행비 지원(보령시) 등 각 시·군별 실정에 맞는 소외계층 지원시책도 발굴되어 추진된다.

道,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이 만족도 가장 높아

— 道内 172개 외투기업 지원환경개선 설문조사 결과

충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72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환경개선 설문조사 결과,

충남의 기업 환경 중 긍정적인 요인으로 ▲비즈니스 관행 개선 ▲배후시장 확장 가능성 ▲노사관계 안정성 ▲조세감면 등 행정기관의 서비스 향상 ▲인접지역 연계교통 편리(도로·철도) ▲외국인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해요인으로 ▲관리직 및 생산직 인력수급 애로 ▲개별입지시 높은 토지가격 ▲해외금융이용 불편 ▲해상교통과 국제항공 이용 불편 ▲외국인 대상 생활정보 부족 ▲외국인 전용 의료·교육 시설 부족 등이 개선할 과제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수는 최초 투자년도를 기준으로 89년 이전 7개, 90~99년까지 31개, 2000~2004년 17개, 2005년 이후 18개로 외국인 투자기업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3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100인 이상 중·대규모 기업도 28개사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형태의 경우 응답기업 73개소 중 ▲본사만 있는 경우 2개 기업 ▲공장만 입지 17개 기업 ▲본사와 공장이 함께 있는 기업이 54개소(73%)로 투자기업 대부분이 함께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에서는 ▲자체 연구소를 갖춘 기업이 25개 기업, 연구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15개소,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기업이 17개소, 기타 16개소로 조사됐다.

입지 선정시 고려 요인으로 ▲관련 국내기업 소재지와 근접성이 가장 높았으며 ▲세금 감면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생산제품 판매 주력시장은 ▲국내시장이 71%로 주로 지역 내 대기업에 65% 혹은 전국에 중간재 또는 원부자재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 및 원자재 조달은 ▲해외와 국내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수도권과 대전, 충·남북에서 76%이상을 차지하고 해외는 절반 가까이(46%)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및 홍보 관련 개선과제로 ▲부지매매에 따른 자본이득(1%)은 입지 선정시 크게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설문(인터뷰)에서 밝혀짐에 따라 개별입지보다 임대용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 및 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부품 및 원자재 조달에 해외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어 既 진출 기업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등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환경 개선과제로 ▲인력수급을 위한 지역대학생 대상 도내 외투기업 홍보강화 ▲도내대학 졸업생 대상 채용박람회 개최 ▲해상운송 노선확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연계 교통망 확충과 ▲외국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단기적으로 외국어 가능 의료기관 지정 및 정보제공과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교육 및 교육시설이 확충과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총평을 요구한 결과 10점 만점 중 6.7점 평점을 기록하였으며 기업들은 외국인 지원제도 중 입지지원 제도와 지방세 감면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道 관계자는 "이번 설문결과 및 2008외투기업 CEO 간담회를 토대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업 환경 개선 과제와 관련된 실국과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 고 말하며, "장기적으로 신기술 도입과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력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설립

- 충남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
- 시·군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진단·자문 역할



충남도는 시·군 공공디자인사업의 진단과 자문 역할을 담당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를 설립하고 2월 23일 이완구 도지사, 강태봉 도의회의장, 센터 관계자 및 유관기관·단체, 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개소식과 함께 공공디자인 포럼을 개최했다.

설립 목적은 현재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충청도내 시·군 자체의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적 특색을 살리며 역사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공공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활약이 기대된다.

설립 장소는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의 공공디자인센터이며 센터장, 사무국장, 도내 6개 생활권역 지부별 2~3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개식사를 통해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과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역할 설명을 하면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적이고 창조적인 공공디자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운영 기본방침을 밝혔다.

이완구 충청남도 지사는 자문위원과 운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축사를 통해서 “예전에는 효율 중심의 개발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문화중심의 개발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디자인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적 과제”라고 말하고 “이러한 때에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를 설립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강태봉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세계 명품 도시를 둘러보면 가로시설물과 건물 배치, 공원 조성 등 도시 전체가 세심하게 배려한 공공디자인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며 한결같이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으로 가꾸어져 있다”면서 “지금 우리도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백제역사의 숨결과 문화를 접목시킨 명품 충남으로 만들어 가야 하며,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개소식 후에 이어진 공공디자인 포럼에서는 「공공디자인과 충청남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온영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온영태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간 환경 디자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협력형 설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늘 충청남도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클리닉센터를 설립한 것은 충남의 공공디자인 추진 의지가 어느 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이며 충남 공공디자인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다"고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

충남도, 『녹색성장 포럼』 창립식 가져

-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Think Tank 역할 수행



충남도는 3월 6일 아산시 호서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대학교수, 기업인, 사회단체, 도민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남도 녹색성장 포럼』 창립식을 가졌다.

이는 세계적인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60년의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된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나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창립식엔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이만의 환경부장관, 강태봉 충청도 의회의장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서대 강일구(남, 65세, 논산) 총장을 포럼 대표로 선출하였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세계에서 최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와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은 필연이자 숙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녹색성장포럼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등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완구 지사가 건의한 내용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생태체험장으로 활용 ▲석면광산 추가 피해방지대책 조속 추진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 정화사업 ▲아산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 지원 ▲폐기물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지원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비 지원 등이다.

한편, 오늘 구성된 충청남도 녹색성장포럼은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내에 사무국을 두고 매 분기별 포럼을 개최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토론회 등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충남발전연구, 충남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워크숍 가져



충남발전연구원(CDI, 원장 김용웅)은 1월 2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언론인, 충남발언 및 충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충남의 전통문화와 공공디자인간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충남 공공디자인의 비전인 『Renovate Chungnam』실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원발전연구원 추용욱 박사는 "공공디자인은 분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성과 창조성이 피어나지 못하는 등 계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큰 분야다."라고 언급하면서 "예산 낭비식 행정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박사는 강원도의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사례와 접목하면서 "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핵심은 3W 1H(Why, What, Who, How)이다. 즉, 왜 공공디자인이 필요한지, 무엇을 디자인 할 것인지,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지,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의 공공디자인 추진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한 남서울대학교 이광영 교수는 "충남은 유구한 백제역사문화를 보유하고 도청이전신도시 및 행복도시 건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강점으로 갖고 있는 반면, 급격한 개발사업에 따른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과 혼잡한 도시경관, 디자인산업 인프라 및 인식의 취약, 그리고 성급한 디자인정책에 따른 역효과 등으로 인해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에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충남이 효과적인 디자인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남디자인총괄본부(가칭)를 시급히 조직하여 공공디자인 추진에 대한 목표, 추진전략과 체계를 갖추고 도시 전체 지구단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발전연구, 충남도의회 행자위 2009년도 업무보고회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은 2월 5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부서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행자위 의원들은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도정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하고 언급하면서 "행복도시, 수도권규제완화,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등 굵직한 현안과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웅 원장은 "산적인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시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의정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금강 역사·특색반영된 사업으로”

— 800여명 성황…사업방향·과제 등 놓고 열기



금강 살리기는 금강의 역사와 특색이 반영된 사업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금강 살리기의 파급 효과를 내륙부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대전일보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월 12일 오후 1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 3층 컨퍼런스홀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금강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3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강주엽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재정팀장은 '4대강 살리기 및 금강 살리기 사업계획'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생활에서 '강'이 갖는 중요성을 주목하고 이를 회복해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서 태동했다"면서 "4대 강 살리기의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 복원 사업이 아니라 환경을 중시하는 생태하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금강 하류에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오니(汚泥)를 준설할 계획으로 하천 내 경작을 금지하고 백마강 뱃길을 복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 팀장은 덧붙였다.



이어 한상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은 '금강 살리기 연계 지역파급 효과와 발전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금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금강 살리기에 정책적으로 부합하면서 지역 특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화, 통합화, 블록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의 주제를 발표한 김명수 한밭대 교수는 "금강 살리기 사업은 최근 하천 복원 사업들이 보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금강이 지닌 물류 중심, 문화적 가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여해 각 분야에서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박성효 대전시장, 이완구 충남도지사, 이상민 국회의원,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 신수용 대전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일보 2월 13일자 1면〉

충남발전연구, 통계자료의 올바른 활용 방안 특강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은 3월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정책기획관실 통계담당자인 조한석 박사를 초청, "통계법 개정과 연구 활용 방안"이란 주제로 특강 교육을 실시했다.

연구기관의 특성상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번 특강은 연구보고서 작성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통계자료 사용 및 올바른 설문조사방법, 그리고 통계법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등 연구과제 수행시 봉착하게 되는 통계자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였다.

또한, 조한석 박사는 "충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속적 통계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공무원 순환보직 특성에 따른 업무 추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충남도에서는 종합적 통계조정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그리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이 포함된 충남통계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입안시 활용할 정확하고 실용적인 충남통계통합DB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충남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겠다

- 경제 불황 벗어나기 위해 정책 설정에 큰 힘 된, 녹색뉴딜정책 심포지엄



녹색성장산업 정책마련과 방안모색을 위한 "녹색뉴딜정책 심포지엄"이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CDI) 공동으로 3월 23일(월) 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영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녹색뉴딜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정책'은 2012년까지 총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의 핵심 정책임에는 틀림없다."고 언급하면서도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일자리 창출면에 있어서도 안정적 일자리,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 관점으로 정책을 보완하여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녹색성장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 극대화 ▲국민 의식개선 및 녹색생활 시스템 마련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SW 및 공간정보산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지향 사업 추진 ▲녹색국토공간 형성 사업 추진 지자체 및 시민단체, 국민 참여 지원 및 확대 ▲외국사례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및 추

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철저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협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연계 발전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당면 과제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학 내 기후벤처산업의 활성화 ▲그린시티 구현을 위한 활발한 정책 지원 ▲기후관련 규제강화 등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로 경기 침체에 대응 ▲국가적 형평성을 고려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성장동력센터 소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혁신정책의 방향"을 통해 "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색기술 개발에 달려 있는 만큼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춰 진정한 '녹색성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서는 녹색뉴딜 연구개발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 및 기술혁신역량을 반영한 최적의 녹색지역혁신체제(GRIS)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덕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뉴딜정책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경제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관광 개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부문별 단기 추진과제로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관광숙박업 육성 ▲에코시스템 기반 녹색 여행업 육성 ▲녹색 기술을 접목한 유원시설업 육성 ▲제로 에너지 그린이벤트 개최 지원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홍보와 교육을 통한 녹색관광사회 전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완 행정부시자는 축사를 통해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환경위기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대 표되는 자원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녹색뉴딜사업이 향후 지구를 지키고 인류의 밝은 미래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며, 오늘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정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구상하여 행정에 접목,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완 도 행정부지사,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선 학계·언론계·NGO단체 전문가, 그리고 도 및 시·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충청권 초광역 인재양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세미나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1월 20일(화) 오후 3시부터 익일 12시까지 대전 및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및 주무관, 전국RHRD센터장 및 연구진, 시·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초광역 인재양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채창균 박사(광역권 인재육성사업의 전망과 효율적 활용방안), 김문연 울산RHRD센터장(부·울·경 광역권 인재육성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그리고 충청권 광역사업의 창의적 발굴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남도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충청남도 평생교육원(천안시 소재)에서 충청남도청 관계관, 평생교육원 관계관, 16개 시·군 담당자 및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충청남도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 통합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인 8개 시·군에서 사례발표를 하였고, 2008년 평생학습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용인시 평생학습관의 박선경 실무관(우수 평생학습네트워크 사례발표)과 아주대학교 이장익 교수(시스템 구성 콘텐츠 개발)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의 구성과 콘텐츠 개발, 홍보방안 등 「(가칭)충청남도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네트워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간담회 및 대전·충남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2월 11일(수), 충남지역혁신협의회 김용웅 의장(충남발전연구원장) 주관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간담회"가 충남발전연구원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국협의회회의 최근동향 및 현행 문제점과 함께 향후 대책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한편, 2월 19일(목)~20일(금), 대전 레전드 호텔에서 협의회 사무국장(충남 최병학 사무국장, 대전 김기희 사무국장) 및 시·도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대전·충남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및 담당자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현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및 '녹색뉴딜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과 앞으로의 추진과제에 대한 관계부처(균형발전위원회) 강성택 담당 사무관의 교육과 추후 (가칭)"지역발전법"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의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2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는 「제2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을 초청하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제도의 법률 및 기술적인 부분의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하여 2월 24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상진 충남수질총량관리센터장의 '제2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현황', 환경부 유역총량제도와 조석훈 사무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현황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진행정도와 제도의 개선사항, 향후 정책방향 등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2단계 총량관리제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의 총량관리제 추진방향과 단계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방도시재생을 위한 국제세미나」개최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에서는 지방도시의 재생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제세미나 및 현지답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월 1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된 국제세미나에서는 영국의 어반플라즈마 양도식 박사가 "영국지방도시의 성공적 도시재생 사례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국의 버밍햄시, 브리스톨시, 맨체스터시 살포드 독의 3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재생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단계적 유동적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정부 및 지자체의 명확한 비전 제시와 리더십,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일본 오카야마대학의 김두철 교수는 일본 나고야시 오조네 지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 주민 간, 지구단위 간 합의 형성과 주변 시가지 정비와 함께 지역 전체의 일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례로 아산시의 '온양중심상권재정비촉진지구', 군산시의 '구도심 및 내항일원 활성화계획', 마산시의 '오동동시장 및 마산시 도시재생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날 토론에는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임서환 전 도시재생사업단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수, 김혜천 한국도시행정학회장, 황희연 국토도시계획학회장, 정철모 한국지역개발학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모색하였다. 논의 결과 도시재생의 일반화된 모델은 없으며 지역의 역사성, 사회성, 경제성을 반영시켜 지역에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지역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19일에는 오전에는 아산시 '온양중심상권촉진지구'의 낙후된 주거지역과 상설시장 등을 답사한 후 아산시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아산시의 단계적 장기적 개발전략과 마스터플랜을 강조하였으며,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커뮤니티 회복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공의 선투자를 통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고, 관광휴양기능에 해외사업을 접목 및 아산 신도심 및 주변지역과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발전을 꾀하며, 주민참여와 도시전체를 포괄하는 방안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천안시와 경쟁 또는 상생관계를 고려한 전략 및 광역적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후에는 군산시 '구도심과 내항일원'의 군산역, 근대역사건축물(구 조선은행, 세관 등) 등을 조사한 후 군산시청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수변공간과 배후지의 연계성, 근대역사유물을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 군산시의 근대역사건축물, 철도를 큰 자산으로 하여 경쟁력 고취,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중국과의 연계방안과 철새를 활용한 아이디어,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의 역할 분담, 랜드마크, 특성화된 대학, 교통 등을 고려한 광역적 도시계획 추진, 성장단계의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계획,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향후에도 도시재생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그리고, 역사적 건축물 및 잠재력, 주민참여를 유도한 마스터플랜과 세부계획의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20일에는 마산시의 산업단지 일원 및 구도심지역, 오동동 시장 골목의 공공미술 등을 현장답

사하고 시청으로 이동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수변공간을 활용한 전략에 대해 볼티모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제언, 로봇랜드가 성장동력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마산시의 민관협의회의 역할 강조, 오동동시장을 중심으로 성과를 타 지역까지 확대, 민관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협의회의 역할, 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마산시의 대응 그리고 마산시가 가지고 있는 워터프론트를 통한 문화 창조 가능성과 도시재생은 주체(민관협력), 시간(장기적 플랜), 창의성(도시의 특성에 맞는 전략)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